

국가 경쟁우위와 권력의 수직적 성장

“

국가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고 경쟁우위를 누리
기 위해서는 경쟁우위산업이 소멸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없는 하위산업
을 발전시켜야 한다.

”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 경 환

1. 국가경쟁력과 권력프로세스

Hughes(1993)는 경쟁력의 개념은 광범위
할 뿐만 아니라 국가집단, 국가, 산업 및 기업수
준에서 일관성 있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
적하고 경쟁력에 대한 두 가지 태도는 구분될 수
있다고 한다. 첫째로 경쟁력은 동적이든 또는 정
적이든 간에 상대적 능률의 문제다. 상대적 능률
은 생산성이나 생산성 성장과 같은 상대적 성과
에 의해서 측정되어질 수 있다. 둘째로, 경쟁력
은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 수입 침투력, 알려진
비교우위지수와 같이 상대적인 무역성과에 반
영된다. 경쟁력에 대한 이러한 두 개념은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지닌 국가가 무역 점유율이 낮
을 수도 있다. 무역 점유율(trade shares)이 세
계시장에서 전략적 경쟁에 의존할 경우 이는 능
률과 시장권력가치의 혼합(mixture)에 의해서
결정된다.

Dollar 등(1993)에 의하면 국가 경쟁력은 혼
히 국가의 무역수지의 관점에서 내재적으로 정
의된다고 한다. 국가가 여러 산업에서 경쟁적 기
업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 무역흑자를 누리나,
경쟁적 기업이 적을 경우 무역적자를 기록한다.
국가경쟁력에 대한 이러한 접근의 문제점은 무

역수직의 불균형은 일시적이라는데 있다. 미국은 지난 10년 간 무역적자가 계속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 환율평가절하(currency devalued) 및 경쟁 국가에 비해서 낮은 임금으로 무역수지는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미국은 실질 임금의 감소와 함께 무역수지는 개선될 수 있으나 미국의 경쟁력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국제적으로 경쟁은 환율의 평가절하나 보다 낮은 임금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경쟁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역수지 그 자체로서 국가경쟁력을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은 국가경쟁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경쟁적 국가(competitive nation)는 높은 소득과 임금을 수반하면서 고도 기술과 생산성을 통해서 국제무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국가이다”.

국가적 경쟁력을 거시경제 현상으로 보고 환율, 이자율 및 재정적자와 같은 변수를 통해서 측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는 환율이 높은 국가(독일, 스위스), 재정적자국가(일본, 이탈리아, 한국) 또는 이자율이 높은 국가(이탈리아, 한국)도 생활의 표준이 신속히 상승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국가적 경쟁력은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의 함수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독일, 스위스, 스웨덴 같은 나라는 고임금과 노동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번영을 누리고 있으며 일본은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의 의존하며 국가경제를 일으켰으나 최근에는 노동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국가적 수준에서 바람직한 목표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적 수준에서 의미 있는 경쟁력의 유일한 개념은 국가적 생산성이다 (Porter, 1990).

국가의 경제적 목표는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생

활표준을 유지하는데 있다. 이러한 경제적 목표는 높은 수준의 생산성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생산성은 인구당 소득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모든 산업에서 생산성우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러한 국가는 인구당 높은 소득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경쟁적 국가는 모든 산업에서 수출하지 않고, 상대적 생산성우위가 가장 큰 산업으로부터 수출하고, 생산성우세가 적은 영역에서는 수입한다. 미국은 2차 대전 직후 실질적으로 모든 부문에서 생산성 선도자이었으나 수출은 생산성 우세가 매우 높은 항공기산업에 집중되었으며, 생산성 우세를 가지고 있던 직물산업에서는 수입하였다. 한 국가가 모든 산업에서 절대적 생산성우위를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는 서로 다른 부문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가의 경쟁력을 전체 경제에 대한 총체적 생산성과 인구당 소득에 의해서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경쟁력은 국가 특성차이에 의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업과 국가 간의 일련의 복잡한 연결에 의존한다. 기업과 국가는 그들의 경제적 구조에서 국제화가 확대된다. 국제화는 기업이 다국적화 되거나 또는 국가가 수입과 수출을 할 뿐만 아니라 해외 직접투자를 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한다. 기업은 소유권의 다양한 연계나 기술, 마케팅, 시장진입 및 기타 영역에서 합의를 통해서 보다 국제화가 확대된다 (Casson, 1983). 이러한 국제화는 경쟁력 분석이 국제무역, 산업조직, 기업이론, 기술적 변화에 대한 분석과 같은 서로 다른 영역의 경제분석에 의존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서로 다른 영역으로부터 실증적 접근과 분석적 수단의 결합을 통해서 국제적 경쟁력의 구성요

인과 결정요인을 찾을 수 있다.

Porter(1990)는 어떠한 국가도 모든 영역에서 경쟁적일 수 없다고 한다. 국가의 인적 및 기타 자원 풀(pool)은 반드시 한정되어 있다. 국가의 자원이 가장 생산적인 분야에 분배되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경쟁우위를 가진 한 산업에서 무역에서의 성공은 국가의 노동, 투입요소 및 자본비용을 상승시키므로 다른 산업은 비경쟁적이 된다. 또한 국제시장에서 경쟁은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한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에 대한 논의에서 특정국가에 기초한 기업이 어째서 특정영역이나 산업에서 국제적 성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국가의 경쟁우위를 기업으로 하여금 특정영역에서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유지하게 하는 국가의 결정적인 특성에 대한 탐색이라고 한다.

기술표준 59호(2006년 12월)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가의 경제주체들은 정부, 기업, 소비자, 노동자, 투자자로 대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의 초점은 자신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객체가 필요로 하거나 선호하는 권력원천의 창출을 통하여 이를 확산 시키는데 있다. 즉 경제활동의 초점은 경제주체와 경제객체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가경쟁력을 국가의 무역성과, 노동생산성 또는 생활표준과 같은 경제적 성과 지표에 의존할 경우, 이는 경제주체나 경제객체들의 경제활동의 목적이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예로써, 무역성과는 경쟁국에 대해서 환율평가 절하 또는 낮은 임금상승율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일시적으로 무역성과를 개선할 수 있으나 국민의 생활표준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또한 국제적 기업은 기업의 글로벌 전략에 의해서 수입

과 수출활동이 결정되므로 무역성과와 국가경쟁력과 직접적인 연결은 무리가 있다.

국가는 모든 산업에서 경쟁적일 수 없으며 특정 산업이나 영역에서 경쟁적이다. 흔히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수출하고 낮은 분야에서는 수입한다. 그러나 생산성이 낮을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으며 낮은 생산성의 산업분야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할 경우 이는 국가의 경제를 건강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생산성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무역성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생활표준은 경쟁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에 의존한다. 인적자원의 생산성은 임금을 결정하며, 자본생산성은 지분소유자의 수익을 결정한다. 높은 생산성은 소득수준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생활표준이 높은 국가도 비경쟁적인 기업을 가진 산업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무역성과, 생산성 또는 생활표준과 같은 경제적 지표는 국가의 경쟁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활동의 초점은 자신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객체가 필요로 하거나 선호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은 권력프로세스에 의존한다. 왜냐하면, 권력프로세스는 권력주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권력객체의 필요나 가치를 만족시키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권력프로세스에 의존할 경우, 이러한 경제활동은 경제객체의 욕구나 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은 경제적 권력원천을 창출하기 위한 권력프로세스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의 경쟁력을 경제주체들에 의한 권력프로세스의

운용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로써, 국가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쟁적 산업을 창출하여 기존의 높은 생산성을 가진 산업 분야의 인력을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경쟁적 산업의 창출활동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인다. 새로운 경쟁적 산업은 높은 생산성에 의해서 창출되기 보다는, 새로운 생산요소의 창출에 보다 의존한다. 생산요소의 창출을 권력프로세스에 의존할 때, 이는 경제주체와 경제객체의 욕구나 가치를 만족 시킬 수 있다.

국가수준에서 볼 때 정부, 기업, 노동자, 투자자, 소비자들은 국가경제활동에 주체가 되며 이들은 그들의 욕구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원천을 창출하여 권력행사를 한다. 경제주체에 의한 권력행사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경쟁 우위를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주체로 하여금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국가경제를 성공적으로 유도한다.

2. 권력의 수직적 성장과 경쟁우위

논의한 바와 같이 권력 속성의 작용은 권력간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 질서를 창출한다. 이러한 질서는 Concordance Process를 통해서 수평적 또는 수직적 성장을 한다. 권력의 수평적 성장은 권력 간에 대등한 또는 평등한 영향력관계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권력의 수직적 성장은 권력 간에 위계적 또는 서열적 관계를 의미한다.

권력은 사회적 갈등의 조정수단이다. 인간의 이해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상충관계에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해의 대립 또는 갈등관계는 권력의 수직적 성장이나 권력결합에 의해서 이해가 조

정되거나 협력적 관계로 변화될 수 있다.

권력의 수직적 성장에서 귀속권력은 지배권력 내에 안주하기보다는 생존본능에 따라 기회를 탐색하고 정체성을 보존하고 권력성장을 통해 권력의 지배/귀속을 반전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권력 수직적 성장은 권력의 concordance process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권력 간에 새로운 동적균형으로 유도한다. 예로서 권력은 지배/귀속속성에 따라 하나의 권력이 강화되어 다른 권력을 지배하려고 할 경우 귀속되는 권력은 권력의 주체적 또는 객체적 변화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권력의 수직적 성장은 concordance process와 권력의 동적균형과 함께 권력순환을 유발하여 변화를 주도한다.

Toeffler(1991)는 모든 사회체제와 하위체제들 간에 동시적으로 완전한 균형이 이루어지거나 권력이 모든 집단 간에 평등하게 배분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억압적인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행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변화 그 자체의 작용이다. 또한 그는 완전한 평등은 변화의 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한다.

이경환(2001)에 의하면 갈등이나 대립관계에 있는 권력 간에 권력의 수평적 성장이 있을 경우는 정체를 의미한다. 욕구가 다른 권력들이 권력의 수평적 성장관계에 있을 경우 권력의 속성작용이 억제된다. 권력속성이 효율적으로 작용하지 못할 경우 권력의 역기능을 야기하므로 이는 사회구성원의 효익을 저해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권력의 수직적 성장보다 권력의 수평적 성장이 보

다 위험하다. 예로써 Mills(1956)는 현대의 미국사회의 권력구조를 분석하였는데 미국이 아무리 민주주의를 주장하지만 특정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사회는 전국 당시부터 동부의 몇몇 명문가문의 지배체제에 의해서 권력이 세습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들 가문은 지금도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할 수 없어도 그들과 연관이 있는 유명인사들로 하여금 권력을 장악하게 한다. Dahl(1961)에 의하면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이행은 시민들 사이에서 보다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소수사이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대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산업화가 진전된 다양성을 존중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권력의 평등보다 권력의 수직적 균형이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산업화가 진전되고 경제가 발전한 상당수의 국가는 비가시적 권력을 귀속대상으로 하여 권력들 간에 권력의 수직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예로써 일본의 경우 일본인들의 일상적인 국민적 행동과 사고의 메카니즘에는 천황제의 원리에 지배되고 있다. 일본의 천황제도는 일본 문화와 전통이 응축되어 있어 신화적 종교적 윤리적 요소가 혼합되어 일본의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상당수의 학자들은 일본이 근대화를 단기간에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천황을 귀속대상으로 한 일본 국민의 단합된 노력의 결과로 보고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군부의 보이지 않는 권력지배에 영향을 받았다. 1960년대에서 1980년 중반까지 한국의 권력구조는 주로 군부에 배경을 둔 군부엘리트들에 의해서 점유되었으며 그들을 지원해주는 기능적 존재로 관료와 지식인이 동원되었다. 민간 정치인들의 참여와 활동이 허용되었지만, 중

요한 정치적 지위는 군부에 배경을 둔 군부엘리트가 독점하였으며 이들은 주로 그들의 정당성을 근대화와 경제발전으로 합리화하였다. 오늘날 민주화가 상당수준 진전되어 군부엘리트의 지배가 많이 약화되었으나 아직도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정치, 경제 및 사회발전에 대해서 가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나 묵시적 영향을 미치며 보이지 않는 지배세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사회질서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군부를 중심으로 권력의 수직적 성장에 크게 의존하였다.

사회구성원들 간에 권력의 이러한 불평등한 분배는 경제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경제활동에서 정부, 기업, 노동자, 투자자 및 소비자와 같은 경제 주체들 간에 권력의 평등한 분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권력의 평등 분배는 변화의 정지를 의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의 정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주체들 간에 권력의 어느 정도의 불평등의 허용은 이들 간에 경쟁과 협력의 concordance process를 유발하며 경제발전의 원천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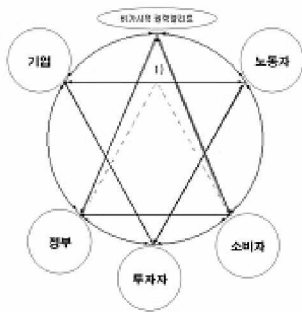
실제로 오늘날 경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국가는 권력의 수직적 성장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어떠한 집단이나 계층이 지배권력으로서 권력의 수직적 성장에 중심으로 작용하는가는 국가의 특성이나 역사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로써 민주화나 산업화가 보다 진전된 국가나 사회에서는 민간의 경제주체가 상대적으로 우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으나 개발 도상국가나 제삼세계의 경우 정부나 군부엘리트 또는 자본가에게 권력을 집중시킴으로써 권력의 수직적 성장을

통해 경제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오늘날 민주화와 산업화가 진전된 나라의 경우 가시적 권력에 의한 지배보다는 비가시적 권력에 의한 지배가 흔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비가시적 권력에 의한 지배는 사회구성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통일되고 인정된 지배 엘리트의 존재를 의미한다. 예로서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천황에게 귀속되므로써 근대화를 앞당길 수 있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교육수준이 높고 부유한 일부의 전통적인 엘리트에 의해서 권력의 수직적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명시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묵시적이며 비가시적인 방법으로 권력행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가의 경제발전은 경제주체들 간에 어느 정도의 권력의 불평등을 통해서 경제주체들 간의 경쟁과 협력의 concordance process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주체와 비가시적 지배권력에 의한 이러한 concordance process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9-1>와 같다.

<그림 9-1> 경제주체와 비가시적 권력 엘리트에 의한 concordance process



주1) 비가시적 권력엘리트에 의한 묵시적 권력지배

<그림 9-1>에서 기업, 노동자 및 투자자 집단은 비가시적 권력보다 경제적 및 가시적 권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 소비자 및 비가시적 권력 엘리트들은 가시적 권력보다 비가시적 권력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 또한 비가시적 권력 엘리트는 귀속대상이 되는 지배집단으로서 현대의 민주화와 산업화가 진전된 나라에서 이들은 주로 명시적인 권력지배를 하기보다는 묵시적 또는 비가시적으로 지배한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지배집단의 권력행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국민적 합의에 의존한다. 현대의 민주화 및 산업화가 진전된 나라의 경우 정부, 기업, 투자자, 노동자 및 소비자와 같은 권력주체들 간에 권력은 상대적으로 균등 분배되어 있다. 권력의 균등분배가 진전된 나라의 경우 권력의 수직적 성장은 비가시적 권력 엘리트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권력의 수직적 성장은 경제주체 간의 concordance process를 야기케 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원천을 제공한다.

권력의 수직적 성장과 concordance process에 의한 경제발전 원리는 산업간 또는 기업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로써 Porter(1990)에 의하면 국가는 인적자원뿐만 아니라 가용할 수 있는 생산요소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국가도 모든 산업에서 경쟁우위를 누릴 수 없다고 한다. 이상적인 것은 이러한 제한된 자원이나 생산요소가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분배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수준에서 경쟁우위는 총체적인 국가 경제에서가 아니라 특정산업이나 산업분할에서 추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는 모든 산업에서 경쟁우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1-2개 산업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로서 미국의 경우 컴퓨터

산업과 방위산업에서, 일본의 경우 자동차산업과 전자산업, 독일은 화학분야와 기계류 산업에서 경쟁전략을 가지고 우위를 누리고 있다.

권력은 생성되어 성장하고 안정기에 이르러 궁극적으로는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국가의 경제적 권력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유지할 수는 없다. 특정 산업의 권력프로세스에 관련된 권력 결정 요소가 급격히 깨어지거나 변화할 때 이러한 산업은 소멸할 수 밖에 없다. 국가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고 경쟁우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경쟁우위산업이 소멸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없는 하위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하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권력순환 질서를 통한 기반조성이 바람직하다. 권력의 순환이 권력이 다섯 속성에 지배될 경우 권력은 동적 균형을 유지한다. 권력의 동적 균형은 양적 및 질적 균형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속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 조건

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산업에 수직적 성장이 존재하고 (국가 수준에서 1-2개 산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 경제주체들 간에 concordance process가 존재하고
- 1~2개 특화된 산업이 소멸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있을 때

따라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점이 되는 이권(1~2개의 특화된 산업이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하위산업)들의 결합을 보호하는 블록을 쌓고 이들에게 비가시적 힘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된 산업을 보호하고 하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체시간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가장 강점이 되는 이권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 주체들의 권력결합을 촉진하고 정치 주체들은 이러한 권력 블록을 보호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준**